[서평 토론]

김희강. 2022. 『돌봄민주국가: 돌봄민국을 향하여』. 박영사.

김동혜 (연세대)

『돌봄민주국가』는 돌봄(care)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 민주주의 모델의 근본가치로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이론 논의에서 돌봄이 사적 호혜의 종류, 혹은 인간의 한시적 취약함을 돌보기 위한 노동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면, 이 책은 돌봄을 ① “취약한 인간에 응답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에 입각한 규범적 가치, ② 현재 사회의 “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 하기 위한 비판적 가치, ③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연대책임” 을 규정하는 실천적 가치로 본다. (7-10, 46-49, 51-54) 이렇게 이해된 돌봄은 호혜나 노동의 일종을 넘어서 민주 시민간 관계의 방식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자기이해 및 성찰의 지침으로써 공적이며 나아가 정치적이다. 바로 그렇기에, 저자는 돌봄을 페미니즘에서 파생된 대안윤리를 넘어서 “정치공동체의 제작 방향에 관한 원칙과 가치의 집합” 인 헌법의 가치로써 “국가구성의 원리이자 국가성립의 근거”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2, 121-126)

80년대에 태동한 돌봄논의는 칸트적 자유주의와 롤스주의적 정의론과 대립하며 독립적인 규범이자 대안윤리으로써 자리매김을 하던 태동기를 지나, 교육, 의료, 정치, 복지 전반에 돌봄의 가치가 제시하는 함의를 고찰하고 이론화하는 성장기를 거쳐, 최근에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비판, 그리고 대안적 디자인을 제안하는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 책의 미덕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는 이 책이 케어리즘이라는 돌봄의 정치적 모델을 한국 민주주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하는 시작이 됐다는 점이다. 많은 돌봄에 관한 논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그치는 반면, 이 책은 한국적 맥락에서 돌봄이 기존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관점을 제공해준다. 둘째로, 저자는 돌봄민주주의라는 이념형을 넘어서 돌봄민주국가를 구성하는 제도 디자인의 안을 폭넓게 제안하며 현재까지 나온 돌봄 논의 중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디자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돌봄논의를 비교적 늦게 받아들인 한국에서, 구체적인 민주국가 모델의 제도적 실천안을 고민하는 첫걸음을 떼게 된 셈이다. 이하 토론문은 이 책을 읽으며 주목하게 됐던 지점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과 고민이 더해진 부분들을 정리했다.

1. 돌봄이 배제되는 방식에 관해

정치이론에서 돌봄은 그 존재가 부인되기 보다는 그 역할과 적용영역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배제돼 왔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킨다. 먼저,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를 시민들의 자족적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11-16) 그런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상호호혜적 의존성이 아닌 의존적 상태에 내던져진 비대칭적 취약성에 응답하는 돌봄은 예외 상황, 혹은 위기 상황에 적합한 가치이며, 결코 일상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 이왕이면 시민간에 돌봄 필요가 없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자족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을 길러내고 사회를 유지하는 일차적 양육과 교육의 장이자 과정으로서의 가족 내의 돌봄관계는 존 롤즈나 브라이언 배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역할과 기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7-18)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인간들의 연고적이며 의존적인 속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인간의 불가피한 의존과 이에 따른 타인과의 필연적인 연계”를 강조한다. 하지만, 취약한 인간들의 의존성에 대한 응답의 방식으로서 돌봄은 일종의 미덕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데 그친다. (21-22) 돌봄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공적으로 제도화 되고 발전되며 적극적으로 실천되거나 좌절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논의는 사라진다. 그 방식은 다르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돌봄을 사적인 영역의 일로 제한시키는 셈이다. (26-27)

돌봄 배제는 결과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마저 왜곡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의 부재와 그 대가를 유난히도 뼈아프게 계수해야 했던 오늘날의 돌봄위기가 실은 돌봄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킨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본다면, 저자가 트론토를 인용하며 지적하듯이 돌봄위기는 돌봄 배제라는 “부정의”의 결과물인 셈이다. 사적일 수 없는 돌봄을 사적인 영역의 일로 취급하여 초래되는 돌봄부정의의 다양한 방식들은 그나마 작동하는 사회 내 돌봄을 좌절시킨다.

2. 돌봄과 정의의 관계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은 많은 경우 돌봄과 정의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강력한 당위성에 비해 서로 돌보는 사회는 가능하다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겨지곤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틀렸으며 나아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도 해친다. 돌봄과 정의의 억지스러운 분리는 돌봄의 책임을 사회 내 특정 구성원들에게 지우며, 돌봄이 “사회제도와 구조에 내장된 권력, 위계 및 사회적 불평등”과 어떻게 불가피하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특권적 무책임’을 조장한다. (237-239) 돌봄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수록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저자는 악순환의 구조라고 지적하며, 영의 억압 개념을 빌려와 돌봄부정의가 어떻게 사회 내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 등의 양상으로 구체화되는지 설명한다. (243-259)

돌봄을 통해 우리는 사회 내 은폐되거나 충분히 가시화 되지 못한 부정의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돌봄의 필연적 정치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영역, 사회영역, 정치영역, 문화영역에 걸쳐 억압이 발생하는 모습과 동학은 사회가 이러한 부정의에 “어

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부담을 함께 분담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를 요구하며, 돌봄 부정의에 대한 예민함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260-262)

3.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본 돌봄

그렇다면 돌봄에 관한 논의는 그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돌봄의 관계들에 적용시키는 작업일까? 즉, 취약하며 의존적인 인간 실존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돌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돌봄 노동과 돌봄에 관한 구조적 노력들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담지 하도록 하는 작업으로 충분한지 질문을 할 수 있다. 평자는 저자가 이 질문에 관해 부분적 긍정을 한다고 이해를 했다. 저자는 비대칭적 권력 상황을 상정하는 돌봄관계의 특성상 구조적 억압을 방조할 소지가 있는 비간섭적 자유보다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돌봄에 어울린다고 얘기한다. (129-130) 또한 저자는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가 야기하는 부정의를 지적하며, 돌봄관계 내에서 정치적이며 사회경제적인 평등을 실현시킬 것을 요청한다. (80-85)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넘어서, 돌봄관계는 스스로의 비간섭적 자유를 포기할 자유와 그 가치를 긍정하게 만든다. 즉, 돌봄민주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비지배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따른 비간섭적 자유가 부재한 상황의 적실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복무하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또한, 시민간 공유되는 보다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특질로서 인간의 돌봄에 대한 필요와 돌봄에 관한 책무를 제시하며, 정치적이며 사회경제적인 평등의 조건을 서로의 돌봄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발견한다. (9-11 ,85-91)

4. 자원이 아닌 인간관계에 주목하는 복지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대한 논의는 복지담론이 그 주를 이뤄왔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복지는 시민들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 제도적 고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복지는 현재 돌봄의 중요한 방편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178-182) 다만, 현재의 복지국가는 노동하는 시민을 기본 단위로 하기에, “노동의 규범과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혹은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급의 일반 시민으로 존중하지 못한다. 복지의 당위성은 결국 생산적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축으로 주장이 되고 설득력을 갖는다. 인간의 필요는 “노동과 생산에 부차적이나 수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저자의 지적은 그렇기에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을 부각시킨다.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는 당위는 생산적 노동시장에 앞서는 인간 보편의 책임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돌봄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적 공유 개념”을 넘어서 동료 시민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제도적 헌신을 통해 가능해진다. (184-185)

이런 점에서 자원이 아닌 인간관계에 주목하는 복지는 더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제도의 디자인을 요구한다. 전통적 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취약 계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일견 명료하며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만, 일시적, 혹은 항시적 복지의 수혜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취약계층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문제에 관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저자가 국내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통해 설명하듯, 일자리 창출로서의 돌봄이 때로는 돌봄 사회화를 해치며 돌봄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304-317) 반면, 돌봄에 입각한 복지는 복지의 여성화를 극복하며 공적 가치로서 돌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 즉, 돌봄을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돌보며, 그 과정에서 동료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까지 더해져야만 돌봄적 복지가 가능해진다.

5. 다섯가지 제도 디자인

저자는 책의 말미에 돌봄민주국가의 제도를 디자인하기 위한 다섯가지 안을 제안한다. 돌봄헌법, 돌봄부, 돌봄책임복무제, 돌봄교육, 돌봄연금으로 이뤄진 이 안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도 흥미롭지만 돌봄의 공적이며 정치적인 중요성에 대한 선언으로서 더 의미적이다. 저자는 돌봄을 사적 호혜의 일종, 혹은 윤리적 지침으로 국한시켜 보기를 거부하며,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아우르는 돌봄의 다양한 층위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돌봄혁명에 준하는 국가 디자인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국가권력의 행사를 판단하는 최종심급의 근거이자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근본규범으로서의 돌봄헌법부터, 구체적인 돌봄의 감각과 당위성을 체화 시키기 위한 돌봄책임복무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 되는 돌봄교육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제도적 실천은 전방위적으로 제안된다.

6. 돌봄정치와 도덕주의에 관한 우려

평자는 이 책을 돌봄의 정치화와 제도화에 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들을 체계적으로 불식시키고 돌봄의 적용범위를 확장 시켜가는 저자의 설득 과정으로 읽었다. 그런 맥락에서, 평자는 돌봄의 정치화와 제도화에 회의적인 입장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관한 저자의 첨언을 구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저자가 피력하듯, 돌봄노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경제적 가치가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돌봄노동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며 돌봄의 가치를 정치화시키는 일에 대한 경계심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돌봄의 숭고성 혹은 높은 가치다. 모성애 이데올로기가 ‘숭고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 육아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듯이, 돌봄이라는 가치 있는 행위를 경제적 가치 측정이나 정치적 권리와 책임의 언어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작동하는 셈이다. 이런 역설적이며 결과적으로 자가당

착적인 ‘돌봄 이데올로기’는 비판하며 무시하기 쉽다. 하지만 평자는 이러한 돌봄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지 않는 두가지 이유가 돌봄의 정치화와 제도화를 막는다고 본다.

첫째는, 돌봄이 도덕주의적이며 비정치적인 쟁투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걱정이다. 이러한 걱정은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이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다는 현실이해에서 비롯된다. 분명 생물학적인 주거나 약함의 관점에서 인간은 평등하게 취약하며 의존적이지만, 다른 여러 관점에서 인간은 불평등하게 취약하며 의존적이다. 돌봄의 논의를 생물학적인 주기와 인간의 신체적 약함에서 비롯된 취약성에 응답하기 위한 공적, 제도적 디자인으로 한정한다면 몰라도, 돌봄을 폭넓게 해석해 인간존엄의 기본이 되며 서로의 필요에 복무하고자 하는 규범이자 실천으로 본다면,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돌봄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즉, 돌봄의 정치화가 출구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도덕주의적 정치를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봄의 정치화와 제도화를 경계하는 큰 이유가 된다. 저자는 이에 대해 한가지 적극적 답과 행간에 숨겨진 또다른 답을 내놓는 듯 싶다. 먼저, 8장에서 저자는 비판이론으로서의 돌봄을 이야기하며 돌봄이 무조건적인 환대나 무비판적인 복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돌봄, 그리고 정의에 합당한 돌봄은, 예민하게 규범적 책임을 묻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돌봄의 성찰적이며 비판적 기능이 깊은 다원주의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의견 불일치와 현실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평자가 이해한 바로는, 저자는 우리 사회가 아직 그만한 치열한 의견불일치와 정치적 대립을 일으킬 만한 돌봄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해 치열하게 시민들이 대립하고 타협하며 답을 찾아가듯이, 돌봄 또한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돌봄이 비록 미덕에 불과하지 않다지만, 최소한의 미덕, 즉 동료 시민의 취약성에 대해 연대하며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면, 과연 돌봄이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가치로서 지향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 회의감이다.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가치에 비해, 돌봄의 가치는 간헐적으로 경험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타인의 필요에까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책임을 질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떠한 형태를 띠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론적 질문일 수도 있겠다. 평자는 저자가 제시한 다섯가지 제도디자인 안 중, 헌법, 책임복무제, 교육 세가지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민들에게 돌봄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이며, 돌봄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즐거움과 의미가 있음을 모든 시민이 경험하게 만드는 시도의 일환으로 위 세가지 안이 읽혔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도 저자의 의견을 더 묻고 싶었다.